

6·3 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 전북교육감 후보들도 교육 가족들에 지지 호소

이남호 “전북교육 다시 세울 것”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학력신장 3.0을 통해 전북교육을 다시 세우고 하향평준화가 아닌 상향평준화의 길을 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첫 거리 유세를 시작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전북대 구정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현재 전북교육이 학력 저하, 학생 수 감소, 교육 예산 축소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혁신이라는 이름만 남은 과거의 교육 방식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교육감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이 다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하향평준화에 머물 것인지가 가르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북교육의 방향 전환 키워드로 “학력신장 3.0”을 제시하며 “구호보다 경영, 이념보다 실행, 말보다 성과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이 지키는 안 전당”이라며 읽기·사기력·문제해결력 등 기본 역량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권역별 명품고 10개 육성’ 공약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권역별 명품고는 특권교육이 아니라 공공재원을 활용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전북교육을 상향평준화하는 정책”이라며 “지역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초학력 강화 정책과 관련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초학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기초학력은 경쟁의 책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본 토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에



운봉향교 유림과 임원 53명이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공식화했다.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서 첫 거리 유세 나서 전북대 구정문 광장서 출정식... 본격 선거전 운봉향교 유림·임원 53명, 이 후보 지지 선언

게 꿈을 말하기 전에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 SI 데이터센터, 수소, 배터리 등 지역 전략산업에 언급하며 “미래 산업과 연결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전북대학교 총장과 전북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한 경력을 언급하며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며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봉향교 유림과 임원 53명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통의 가치와 인성교육을 현대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후보”라며 “효와 예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조화롭게 추진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운봉향교 측은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인성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길러야 한다”며 “이 후보의 교육 철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 선거사무소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 후보 측을 둘러싼 선거 후보비 대담 요구 및 언론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선거사무소는 특정 언론사 관계자와 사기업 간 통화 녹취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 측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지지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천호성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21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유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북대 구정문 앞에서 유세단 발대식 정읍·고창 주민 500명, 천 후보 지지 선언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가 21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유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지자와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선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천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깨끗하고 청정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청렴한 교육행정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천 후보 측은 최근 불거진 언론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경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전북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깨끗하고 청정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전북교육과 교육 가족을 위해 끝까지 현장을 누비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현장 반응에 대해 “지나가는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웃음으로 화답해주는 모습에서 큰 힘을 얻었다”며 “이 힘을 바탕으로 더 힘 있게 전북교육의 변화를 위해 뛰어가겠다”고 말했다.

천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깨끗하고 청정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청렴한 교육행정 구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천 후보 측은 최근 불거진 언론 관련 금전 거래 의혹과 경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전북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후보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깨끗하고 청정한 교육 환경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전북교육과 교육 가족을 위해 끝까지 현장을 누비며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언급했다. 또한 “캠프 내에서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인물이 언론 관계자와 금전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 후보와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의 휴대전화까지 포렌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가 캠프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조직적 개입 여부를 포함해 폭넓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천 후보 측은 “공직선거는 무엇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 가치”라며 “선거 과정에서 언론과 금전이 결합하는 구조가 사립로 확인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든 의혹은 반드시 수사기관을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 후보 측은 이번 선거가 정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는 개인 간 공방이 아니라 전북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비전 중심의 경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고창·정읍 지역 주민 500명은 천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농촌 교육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지지 이유로 들며 “전북교육이 지역 소멸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촌 지역은 학생 감소와 학교 통폐합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교육이 지역을 살리는 핵심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 유학 확대, 교육 귀촌 정책, 작은 학교 지원 강화 등 천 후보의 정책 방향이 지역 현실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특별취재반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 인식 높인다

전북교육청, ‘환경교육 배움나눔터’ 오늘까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을 맞아 환경교육주간과 연계한 ‘환경교육 배움나눔터’를 21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환경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교육 배움나눔터’는 생태 및 기후 분야 전문가 초청 특강 형태로 진행되며, 이틀간 연속 강연으로 구성됐다.

첫날인 21일에는 유호 관장이 ‘생물다양성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유 관장은 생물다양성 감소의 원인과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종 다양성 감소와 서식

지 파괴 문제를 짚는다. 그는 생물다양성 보전이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둘째 날인 22일에는 조천호 박사가 기후위기,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회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조 박사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문제로 제시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을 포함한 교육공동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교육청, ‘청림 함께학교’ 본격 운영

유·초·중·고 13곳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미래세대의 청림 의식 함양과 교육공동체 중심의 청림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전북 청림 함께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적·책임·약속·절제·정직·배려 등 청림 6대 덕목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내재화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유치원 1곳,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6곳 등 총 13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학교 규모에 따라 120만 원에서 1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들은 올해 연말까지 교과 연계 청림교육을 비롯해 청림 체험교실, 청림 동아리 운영, 봉사활동 등 다양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청림 실천 문화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통해 청림을 단순한 규범이 아닌 일상 속 실천 가치로 정착시키고,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대, 전북 RISE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S등급'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전북 RISE사업(단장 한동욱)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전북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이번 평가는 전북 RISE사업 1차년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전주대학교는 A그룹 내 S등급을 받았다. 이는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수요 기반의 실무형 인재양성, 산학협력 고도화, 지역 정주 기반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다.

특히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주대학교는 전년도 사업비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돼 2차년도 RISE사업 추진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전주대학교는 RISE사업을 통해 전북 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와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분야별 교육·연구·산학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AI Native 인재양성, 농식품 업사이클링 기반 생명·전환산업 혁신 클러스터, 전북형 치유 문화관광 연구 클러스터, 성인학습자 전환형 학사체계 구축, 목장형 유가공 산업 중심 감동 관광 거점화 사업 등 다수의 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실행력을 입증했다. /김재훈 기자

“보호자 교육적 방임엔 무기력, 교사엔 과잉 대응”

전교조 전북, “학생 장기 미등교 대응·아동학대 시스템 이중잣대 바로잡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장기 미등교 상황과 관련해 보호자의 교육적 방임에는 공적 대응이 미흡한 반면, 교사 대응 아동학대 신고에는 과도하게 대응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이 두 달 넘게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으나, 학교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수사기관과 지자체의 대응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전주미산초등학교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학생이 새 학기 시작 이후 장기간 등교하지 않았고 학교가 홀스쿨링 대안학교, 전학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보호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가 수사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 부서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일부 지자체 담당 부서가 “교육적 방임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같은 상황과 달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에는 즉각적인 조사와 분리조치, 전수조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하며 “학생 보호에는 소극적이고 교사 대응에는 과도한 이중 기준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상단수가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 중심의 대응 체계와 가정 내 방임 문제를 동일하게 다루는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한 제도 개선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신고와 조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의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서가 제출된 사례 상당수가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감 의견서 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육 현장의 전문적 판단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육도 흔들린다”며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사 보호는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부는 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교육감 의견서의 수사·조사 반영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과도한 분리조치 및 전수조사 기준 개선 △교육적 방임 의심 사례에 대한 교육청·지자체·수사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생의 장기 미등교 문제와 교육적 방임에 대한 공적 대응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청림계약 문화 정착... 전북교육청, 계약업무 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청림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1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됐으며,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약 900명이 참석했다. 이번 과정은 계약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과 절차 개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사항 △최근 계약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물품 및 용역 계약 실무 이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제품 우선구매 △공공구매제도 의무 이행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청림계약 실현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동시에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정책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 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수상 기관에는 익산교육지원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북대학교 등 총 2개 기관이 포함됐다. /오상근 기자